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8월 6일(월) 조건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KDI 현안분석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김영일 KDI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 향후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
 - 국내주택가격 조정과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대내·외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가능성은 우리경제의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여건의 악화는 가계부문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특히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클 것으로 우려
 - 또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될 경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자금중개기능이 저하될 가능성

- 본고는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문의 부채상환여력을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가구 특성별 취약성과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 자료로는 가구별 소득-지출 흐름과 자산-부채구조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한 가계금융조사(2011년)를 사용
 - 부채상환여력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가구별 현금흐름과 순자산 여력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실위험이 비교적 높은 부채가구와 부채 규모를 파악
 - 또한 부채상환여력에 기초하여 가구 특성별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부실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전가될 손실위험에 대한 시사점 도출

2.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평가방법

-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과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구별 현금흐름과 순자산 정보를 사용
 - 현금흐름과 순자산 여력이 부족할수록 외부충격에 취약하므로 현금흐름과 순자산을 중심으로 가계부문의 부채상환여력을 평가할 필요
 - 가계소득이 소비와 부채상환액 등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순자산(=자산-부채)이 감소하게 되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소득 또는 금리 충격 등에 대해서도 취약하게 됨.
 - 가계의 현금흐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자산액이 부채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추가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가능하여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자산가격 충격 등에 대한 완충 역할이 가능
 - 가계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주요지표로서 소득(Y)에서 소비(C)와 부채상환액(DS; Debt Service)을 뺀 재무여력(FM; Financial Margin)을 사용

- 이 경우 소득대비 채무여력은 $FM/Y=1-C/Y-DS/Y$ 로 표현되는데, C/Y 는 평균소비성향이며, DS/Y 는 부채상환비율(DSR; Debt Service to Income Ratio)로 일컬어지는 소득대비 부채상환액의 비율임.

- 현금흐름상의 채무여력과 더불어 자산(A; Asset)에서 부채(D; Debt)을 뺀 순자산(NW; Net Worth) 정보를 사용하여 부채상환여력을 평가

- 이 경우 부채대비 순자산여력은 $NW/D=A/D-1$ 로 표현되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비교적 많을 경우 순자산여력이 큰 양(+)의 값을 갖게 되어 자산가격 하락충격 등에 대해 완충역할이 가능

- 본고는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주요지표로 채무여력(FM/Y)과 순자산여력(NW/D)을 함께 사용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부문의 완충여력을 평가하고자 함.

- 예를 들어, 채무여력과 순자산 여력이 부족한 부채가구의 규모와 이들 부채가구가 보유한 부채액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가계부문 전반의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가구별 채무여력과 순자산여력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추정

- 부실위험이 큰 부채가구를 식별함으로써 대출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계부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부채액과 손실위험 대출액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채무여력(FM/Y)과 순자산여력(NW/D)이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가구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 가구의 부채 중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출금융기관의 손실로 전가될 수 있음.

- 동 가구를 부실가구로 정의하여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에 전가될 손실에 해당하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를 추정하게 됨.

- 여기서 부실가구의 부채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계부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부채액에 해당하며, 부실가구가 보유한 부채 중 자산 매각만으로 상황이 어려운 부채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가계부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액이 됨.1)

3.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가. 기초자료 분석

□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를 위해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분석

- 가계금융조사는 전국 약 10,000가구에 대한 표본 면접조사로서 가구특성,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가장 최근 자료가 2011년에 해당2)

- 가치분소득, 소비, 부채상환액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현금흐름상의 가구별 채무여력(FM/Y)을 추정하고3) 가구별 자산-부채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순자산여력(NW/D)을 계산

□ 가구자료에 따르면 부채가구 중 현금흐름이 취약한 적자가구의 비중이 높고 순자산여력이 열악한 가구도 적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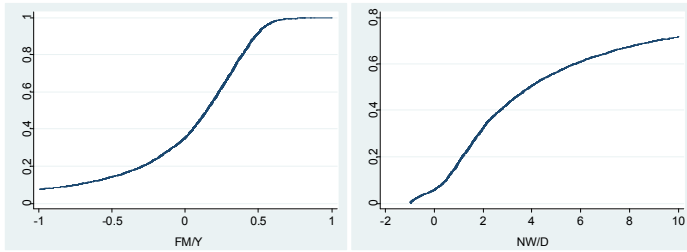
- 부채가구 중 채무여력(FM/Y)이 음(-)인 가구 비중이 1/3 정도로 높고, 순자산여력(NW/D)이 음(-)인 가구 비중도 7% 정도로 낮지 않음.

1) 전자의 경우 부도발생시 신용위험 노출액(EAD; Exposure At Default)으로 일컬어지며, 후자의 경우는 부도발생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로 일컬어짐.

2) 자산과 부채는 2011.3.31 기준이며, 소득과 지출은 2010년 1년 동안을 대상으로 함.

3) 다만, 가계금융조사에서 소비항목이 누락된 관계로 소득, 자산, 부채, 가구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된 소비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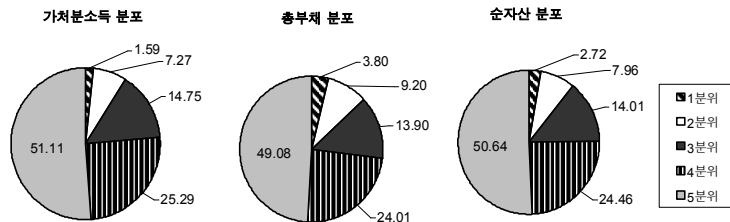
재무여력(FM/Y)과 순자산여력(NW/D)의 누적분포 (금융부채 보유가구 한정)



□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부채가구일수록 보유 부채비중이 높고 소득과 순자산의 보유비중도 평균적으로 높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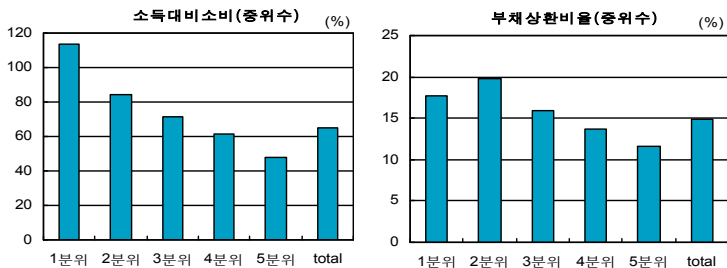
○ 소득 4~5분위가 보유한 부채가 전체의 73% 정도이며, 이들 가구의 소득과 순자산은 각각 76%와 75% 정도로 보유 부채비중을 소폭 상회

가처분소득, 총부채, 순자산의 소득분위별 분포 (금융부채 보유가구 한정)



○ 저소득가구의 부채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소득대비 소비(C/Y)와 부채상환비율(DSR)이 높아 재무여력은 취약한 편임.

소득분위별 소득대비 소비(C/Y)와 부채상환비율(DSR) (금융부채 보유가구 한정)



나. 주요 가구특성별 부채상환여력 평가

□ 소득분위별로는 하위 소득구간에 속할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도 비교적 큰 모습

○ 소득 1분위의 경우 취약부채가구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정도 높고, 부실위험 부채의 비율도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이 취약한 부채가구와 부채액의 규모

소득분위	소득분위별 취약부채가구 비율			소득분위별 취약부채액 비율 (%)		
	FM/Y<0 NW/D<0	FM/Y<5 NW/D<10	FM/Y<10 NW/D<20	FM/Y<0 NW/D<0	FM/Y<5 NW/D<10	FM/Y<10 NW/D<20
1분위	13.48	16.03	18.03	10.30	14.32	17.24
2분위	5.95	7.44	8.56	7.02	7.78	8.88
3분위	2.24	2.70	3.40	4.71	5.27	7.09
4분위	1.10	1.51	2.13	2.24	2.97	4.08
5분위	0.49	0.98	1.47	1.84	4.57	5.75
전체 (수도권)	3.28 (2.67)	4.12 (3.61)	4.95 (4.44)	3.13 (2.64)	4.95 (4.82)	6.26 (5.95)

주: ()안은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에 한정된 경우

○ 이는 저소득층 부채가구가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부채가구 중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가구 비중은 18% 정도로 높은 편임.

○ 다만 저소득층이 보유한 부채 중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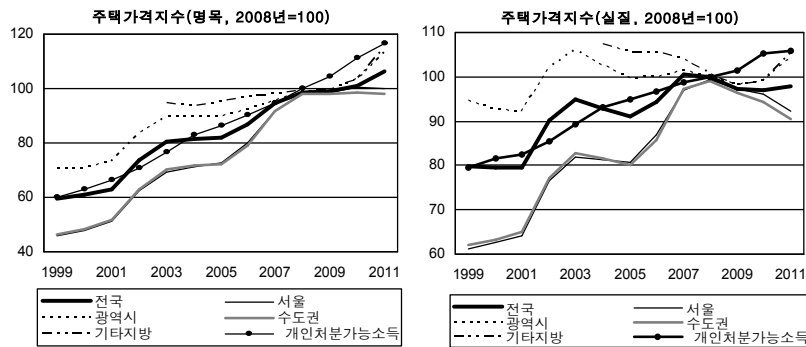
- 소득 1분위 보유 부채액이 전체 부채액의 3.8% 정도이므로 1분위의 취약부채액 비율이 17%라도 전체 부채액 대비로는 0.7% 정도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특별히 열악하지는 않은 모습

○ 최근 주택가격 조정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거주 가구의 부채상환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8년 위기 이전까지 소득증가율을 상회하여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며, 위기 이후에는 완만한 조정을 기록
- 반면,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위기 이전까지 물가상승률 정도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실현

지역별 주택가격 추이: 수도권 vs. 비수도권



주: 해당변수의 명목 및 실질값(CPI로 실질화)은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된 2008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설정하여 추이 비교.
 자료: 국민은행, 통계청

○ 수도권 거주 취약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실위험 부채액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편임.

- 예를 들어,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부채가구의 비중은 수도권이 4.44%로서 전국(4.95%)보다 다소 낮음.

○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의 조정 폭이 확대되거나 장기간 지속된다면 수도권거주 가구의 부채상환여력이 약화될 가능성

□ **중·하위 소득구간에 속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룹 모두에서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 비중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 비중도 높게 나타남.**

○ 이는 부채상환여력이 종사상 지위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소득구간에 따라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

- 다만 취약부채가구 비중이 중·하위소득 임금근로자 그룹에서 좀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부실위험 부채비중은 동 소득구간의 자영업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자영업종사 취약부채가구의 부채비율이 임금근로 취약부채가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시사

종사상지위별 취약부채가구와 취약부채액의 규모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별 취약부채가구 비율			종사상지위별 취약부채액 비율 (%)		
	FM/Y<0 NW/D<0	FM/Y<5 NW/D<10	FM/Y<10 NW/D<20	FM/Y<0 NW/D<0	FM/Y<5 NW/D<10	FM/Y<10 NW/D<20
임금근로자 (중·하위 소득)	3.06 (5.57)	3.83 (6.99)	4.75 (8.29)	3.80 (4.99)	4.82 (5.69)	6.61 (7.46)
자영업자 (중·하위 소득)	2.59 (4.47)	3.37 (5.21)	4.05 (6.08)	2.88 (6.92)	5.83 (7.89)	6.76 (10.35)
기타	3.13	5.21	5.21	1.12	2.04	2.04

주: ()안은 중·하위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1~3분위에 한정된 경우

□ **다중채무가구의 경우 차입기관 수가 많을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비율이 높고 부실위험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차입기관수가 많은 다중채무자일수록 경기부진으로 인한 소득 감소나 자산가격 하락 등의 충격에 대해 완충여력이 약함을 시사

- 가령, 차입금융기관이 3곳 이상인 가구 중 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이 모두 음인 가구의 비중과 보유부채액의 비중은 각각 8%와 6%를 상회하여 차입기관이 2곳 이하인 가구에 비해 비교적 취약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차입기관수에 따른 부실위험 부채가구와 부채액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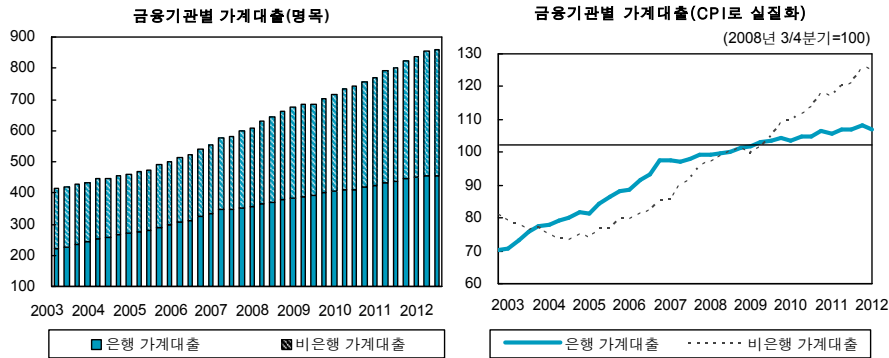
차입기관수	차입기관수별 취약부채가구 비율			차입기관수별 취약부채액 비율		
	FM/Y<0	FM/Y<5	FM/Y<10	FM/Y<0	FM/Y<5	FM/Y<10
	NW/D<0	NW/D<10	NW/D<20	NW/D<0	NW/D<10	NW/D<20
1곳	2.50	3.26	3.80	1.84	2.59	3.07
2곳	3.40	4.11	5.20	4.28	7.21	9.58
3곳 이상	8.04	9.82	11.79	6.26	10.31	12.94

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의 부채상환여력을 파악할 필요

○ 은행부문 가계대출은 2007년 이후 다소 안정적 증가세를 가록하였으나 비은행부문 가계대출은 2008년 위기에 불구하고 GDP 증가율보다 빠른 상승세를 기록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추이: 은행 vs. 비은행



주: 그림에서 은행은 예금은행이며, 비은행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기관, 연금기관,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가계대출

□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채무불이행시 채권금융기관에게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위험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추정

○ 부채상환여력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부실가구를 식별하고 부실가구가 보유한 부채규모와 채권자에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률을 다음과 같이 (1), (2), (3) 등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정⁴⁾

(1) 재무여력과 순자산여력이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가구를 부실가구로 가정한 경우

- 이 경우 부실가구 보유 부채액은 전체 부채액의 3.1% 정도이며 부실가구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률은 1.6% 정도로 추정됨.

(2) 재무여력이 5%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10% 미만인 가구를 부실가구로 분류하고 부실가구의 순자산여력이 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

- 이러한 순자산여력의 감소는 자산가격 하락 또는 자산에 대한 회수율 감소에 의해 초래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부실가구 보유 부채액은 전체 부채액의 5% 정도에 해당하며, 부실가구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률은 1.9% 정도로 추정

(3) 재무여력이 10% 미만이며 순자산여력이 20% 미만인 가구를 부실가구로 분류하고 부실가구의 순자산여력이 0%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

- 이 경우 부실가구 보유 부채액은 전체 부채액의 6.3% 정도이며, 부실가구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률은 전체 부채액의 2.3% 정도로 추정

4) (1)은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 시나리오이며 (2)와 (3)은 스트레스 상황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임. 여기서 (2)와 (3)은 (1)과 비교하여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자산에 대한 회수율이 감소한 경우로 해석가능

부실위험이 큰 부채규모와 채무불이행시 예상 손실률

(%)

금융기관별 차입가구	해당 그룹별 부실가구 보유 부채액 비율			해당 그룹별 채무불이행시 회수불능 부채액 비율		
	(1)	(2)	(3)	(1)	(2)	(3)
은행차입만 있는 부채가구	0.93	1.73	2.25	0.27	0.46	0.63
비은행차입만 있는 부채가구	5.28	6.55	7.72	3.57	3.92	4.27
은행+비은행 동시차입가구	4.15	5.15	10.02	1.59	2.07	2.90
전체 부채가구 (수도권)	3.13 (2.64)	4.95 (4.82)	6.26 (5.95)	1.57 (1.36)	1.89 (1.69)	2.33 (2.13)

주: ()안은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에 한정된 경우

-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정된 결과,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에
게 전가가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전체 부채액 대비 높은 편은 아
닌 것으로 보임.

□ 금융기관별로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에는 큰 차이

- 부실위험 가계대출 비중과 차입가구의 채무불이행시 전가가 예상되
는 손실률은 은행의 경우 비교적 작은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
우에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부채가구의 부실위험 부채비중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4. 요약 및 시사점

□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부채상환여력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어 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극단적인 시나리오 가능성
을 열어두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임.

□ 그러나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가 보유한 부채가 비교적 적더라
도 이들 중 부실위험이 큰 부채가구의 수가 많음에 주목할 필요

- 소득구간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부채가구
의 비율이 높고,
- 종사상지위별로는 영세자영업자와 더불어 저임금근로자 그룹에서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상의 부채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가 보유한 부채액이 적더라도 이
들 가구의 수가 적지 않고, 향후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부실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은 은행부문이 비교적 낮은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행부문의 가계대출은 부채상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가구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충격에 따른 부실위험 부채비중과 손실위험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비은행부문의 가계대출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비중
이 높은 편이어서 충격에 따른 손실위험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중채무자의 부실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비은행금융기관
에 대한 차입의존도가 높을수록 부실위험 부채의 비중이 큰 편임.

□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가운데 현재 당면한 하방위험에 대응하여서는 비상계획마
련을 포함한 위험관리노력과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모색

- 우선, 단기적인 경기부양 목적의 금융규제 완화 등 임의적인 규제
변경은 규제 본연의 목적을 희석시키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
- 현금흐름상의 적자가구 비중이 낮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적으로는
가계의 재무적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모색

- 예를 들어, 순자산여력이 크더라도 자산의 유동성이 낮아 현금흐름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거래활성화와 유동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및 금융지원방안 등을 모색
 -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해당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이 비교적 높은 상황이므로 향후 대출에 있어서는 차입자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
- 부실위험 부채가구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이 부각되고 있어 가계부문의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이 실현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가계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
 - 특히 취약부채가구에 대해서는 경기하강 시에 부실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취약계층의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

◆ 문의: 김영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02-958-4084)

※ 본 논문은 『KDI 경제동향(2012. 8)』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DI 경제동향』은 8월 8일(수) 오전 9시 30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